



의안번호	제54호
------	------

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차경선 의원 외 4명
제출연월일	2021. 05. 17.

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54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05. 17.

대표발의자 : 차경선

공동발의자 : 박영자, 박승용,
조용훈, 김진호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(안 제1조)
- 나. 정의 (안 제2조)
- 다.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라. 보조금의 지원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, 제2조, 제3조
- 나. 입법예고 : 2021. 5. 17. ~ 5. 21.(5일간)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호관찰 대상자 등”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(이하 “대상자 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2. “범죄예방단체”란 논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18조 또는 제67조 따라 조직·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의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.
3. “범죄예방 활동”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, 범죄자 교화·개선 및 지원,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며,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민의 협력) 논산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담·심리치료
2.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3.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
4. 긴급생계비 등 경제지원
5.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갯생보호시설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,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차경선 의원 외 4인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(受講) 및 갱생보호(更生保護)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
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“보호관찰 대상자” 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2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3. 「형법」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4. 「소년법」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“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형법」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
2.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
3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
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“갱생보호 대상자”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